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바라보는 자본주의의 미래:

신자유주의적 사회화와 아시아적 가치의 확장 사이에서*

구민 교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교수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세계자본의 힘과 어떻게 상호작용해 왔는지를 검토하고, 선진 경제들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담론들이 1997년과 2008년 두 금융위기 사이에 나타났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1990년대 말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주요국들의 경제 담론과 구체적 정책 대응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적 관점에서 '아시아적 가치'라는 담론이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중상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지적한 후 동아시아 외환위기에 따른 동아시아 발전국가론 및 아시아적 가치론의 급속한 몰락 과정에 분석의 초점을 둔다. 또한 본 연구는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통해 뼈아픈 각성을 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편으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신자유주의적으로 사회화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아시아적 가치를 확장 또는 복합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는지 설명한다. 동남아 국가들은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원칙에 따른 내부체제의 설계뿐만 아니라 역내 국가들 간에 비록 초보적인 형태이나 과거에는 없던 역내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2008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다. 유로존의 위기에 따른 세계 거시경제의 불안정, 중미간의 경쟁 심화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 등 여러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구상하는 자본주의의 미래가 현재의 연장선상에서 뿌리를 내리게 될 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것이 지배담론과 대립적인 모습을 취하기보다는 보금자리형 연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주제어: 동남아시아, 신자유주의, 아시아적 가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한국연구재단-2011-B00014-I00469)이다. 본고의 완성에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과 김상배, 손열, 이승주, 전재성, 조홍식 교수님들께 감사 드린다.

1. 서론

1990년대 들어 미국식 신자유주의로 무장한 세계화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반발도 거세지기 시작했다. 개인주의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미국식 자본주의의 거대한 담론에 맞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꺼내든 대항담론은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였다. 여러 국가들의 여러 논자들에 의해 주창된 아시아적 가치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개인주의 보다는 집단주의/공동체주의, 서구식 민주주의보다는 유교적 권위주의, 시장자본주의보다는 국가개입 자본주의 등을 특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의 국가는 수탈적 국가(predatory state)가 아닌 온정주의적(paternalistic) 국가이며 시장의 실패를 방지하고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이므로 그러한 국가에게 개인의 자유를 양보하는 것이 정당화되었던 것이다. 이는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와 다양한 종교를 가진 동남아시아 국가들, 특히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1990년대 중반 급속히 확산되었다. 그 당시 중요한 논객으로 활약한 이들이 마하티르 모하마드(Mahathir Mohamad) 말레이시아 전 수상과 리관유(Lee Kuan Yew) 싱가포르 전 수상이었다. 그러나 1997년 여름에 불어 닥친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아시아적 가치 논쟁에 갑작스런 종지부를 찍었다. 폴 크르구먼(Paul Krugman)으로 대표되던 아시아적 가치의 비판론자들은 개인의 창의성을 억누르는 국가 중심성과 기술혁신보다는 무제한의 생산요소 투입 증가를 통한 경제성장 모델의 한계를 지적하며 아시아적 발전모델을 기적(miracle)이 아닌 신기루(mirage)이며 허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¹

1. ‘아시아적 가치’는 여전히 논쟁적 개념이며, 유교, 불교, 회교, 기독교 등 동아시아의 문화적 다양성에 내재하는 보편성에 대한 규명은 여전히 미결의 과제이다. 또한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을 선도한 동북아의 유교적 가치가 동남아의 불교 또는 회교적 가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Sub-Orientalism’ 혐의가 있다는 비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아시아적 가치’는 어디까지나 ‘상대적(relative)’이고 ‘관계적(relational)’인 개념이다. 탈냉전 초기인 1990년대 들어서 미국이 기존의 관대한 거시경제 및 무역정책에서 벗어나 정치-안보 이슈와 경제 이슈를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광풍이 지나간 후 정확히 10년 후인 2008년에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자 동아시아 외환위기 직후 용도폐기된 것으로 치부되었던 아시아적 가치와 아시아식 발전국가적 담론의 탄력성을 재조명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는 1997~98년 동아시아 위기와 함께 각국 정부가 어떻게 세계화되고 자본이 빠르게 움직이는 세계에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가라는 정치경제학의 핵심 질문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국가간 협의체 역할을 한 아세안 + 3(ASEAN Plus Three, APT), 2000년대 초중반 지역 경제통합을 위한 치앙마이 이니시어티브(Chiang Mai Initiative, CMI), 동아시아 자유무역 지대(East Asian Free Trade Area, EAFTA),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 등의 어젠다가 제시될 때만 해도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아시아적 가치를 부활시키려는 시도가 잠시 있었지만, 1990년대 초중반과 같은 활기를 찾아볼 수는 없었다. 이는 곧 동남아시아 국가들, 더 넓게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대항담론 생산을 포기하고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세계자본의 힘과 상호작용해 왔는지를 검토하고, 선진 경제들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담론들이 두 금융 위기 사이에 나타났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주요국들이 1990년대 말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떤 담론과 구체적 정책 대응을 만들어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위의 질문에

구분하면서 동아시아 교역 상대국들에게 (Super 301조로 대변되는) 공격적 일방주의 (aggressive unilateralism)로 경제개혁과 시장개방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아시아적 가치 논쟁은 바로 이러한 맥락이 낳은 반미, 반서구, 반신자유주의 정서로부터 본격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적인 관점이다. 즉, 아시아적 가치는 역내 국가들의 내부적 동질성이 강했기 때문에 내생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더’ 이질적인 서구국가들,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압력에 심리적, 정치경제적으로 저항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외생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적 가치가 곧 ‘아시아적 시민의식(Asian citizenship)’이나 ‘아시아 공동체 인식(sense of Asian community)’을 말할 때와 같은 정도의 문화적 동질성을 내포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²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II절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대항담론으로서 등장한 발전국가 모델과 아시아적 가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동남아시아적 관점에서 아시아적 가치라는 담론이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증상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지적한다. 제III절은 동아시아 외환위기에 따른 동아시아 발전국가론 및 아시아적 가치론의 급속한 몰락에 초점을 둔다. 주지하다시피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단잠을 깨우는 소리(wake-up call)였다.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자유화 전략만으로는 점점 더 거세지는 세계화의 높은 파고에 대응할 수 없다는 뼈저린 각성의 시간이었다. 제IV절은 이러한 각성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편으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신자유주의적으로 사회화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아시아적 가치를 확장 또는 복합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는지 분석한다. 제V절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모색되고 있는 확장된 아시아적 가치의 의의와 한계를 분석한다. 끝으로 제VI절은 본 연구의 핵심적 주장을 요약하고 이론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II. 대항담론으로서의 발전국가 모델과 아시아적 가치

최근 세계 금융 및 경제위기로 인해 시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개입

-
2.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진원지이자 1997년 위기 이후 동남아에서 등장한 담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태국의 '탁신노믹스(Thaksinomics)'였다는 점에서 태국의 사례도 중요하다. 그러나 다음의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태국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하지 않았다. 첫째,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마하티르나 리관유와 같은 강력한 대항담론 생산자가 없었다는 점이다. 둘째, 탁신노믹스의 대중융합주의적 성격은 논외로 하더라도 그것이 안고 있던 분열적 속성, 2006년 쿠데타에 따른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총리의 축출, 이후의 정정 불안 등 정치경제 외적으로 통제해야 할 변수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태국은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세 나라와 같은 수준에서의 분석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탁신노믹스의 내용과 한계에 관해서는 제IV절에서 다시 논의한다.

이 늘고 있다. 특히 산업정책에 대한 각국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The Economist, 2010a, 2010b).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의 입장이 대립해왔다. 하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발전국가적 개입주의이다. 이 두 입장은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에서는 서로 다른 시각을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국가 대 시장(state versus market)’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공통적으로 갖는다.

우선 신고전주의적 산업정책론은 성장의 원인을 최소한의 정부 개입과 시장중심의 산업화에서 찾고 있다.³ 특히 미국과 영국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중추로서 자유무역과 금융자유화를 강조해왔다. 이들은 정상시장거래(arms-length market transactions)가 자본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며, 자본시장과 금융제도의 자유화는 개도국의 국민들에게 전세계의 상품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편익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한 국가의 경제발전은 개도국 시장이 더욱 개방적이고 정치인들과 관료들에 의해 유발된 비효율에 의해 덜 억압받게 되는 수준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한다(Shleifer and Vishny, 1998; Friedman, 1999; Dore, 2000).

이와는 반대로 발전국가론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눈부신 경제성장이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⁴ 성장, 생산성, 경쟁으로 요약될

-
3. 1970년대 이후 개인의 선택과 시장의 역할을 우선시하는 신고전주의 경제학 패러다임이 경제학의 주류로 자리매김하면서 정부의 개입은 시장실패가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사고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주류 경제학에서도 이론적으로는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장실패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정부가 어떻게, 얼마나 개입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우며, 일단 정부의 재량에 의한 개입이 허용되면 정책의 오남용, 정부실패, 시장왜곡, 사회후생 하락 등의 위험이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주류 경제학은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정부개입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다. 특히 산업정책은 경제정책 중에서도 자의성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고 특정 부분을 보호, 육성 및 개입하는데 따르는 왜곡의 우려가 심하다고 보아 주류 경제학에서는 더욱 부정적인 입장이다.
 4. 찰머스 존슨(Chalmers Johnson)의 1982년 저서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의 출판 이래, 발전국가모델은 전후 동아시아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이 되었다. 20세기 초 알렉산더 거셴크론(Alexander Gerschenkron)의 후발경제발전(late economic development) 모델과도 관련이 있는 존슨의 발전국가모델은 계획-비합리적(plan-irrational) 사회주의 이론에서부터 자유주의적 근대화이론에 이르기까지

수 있는 경제발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발전국가는 계획과 전략적 목표에 따른 제도적 배치를 통해 경제발전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의 형태를 의미한다. 발전주의자들은 어떤 나라든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선진국들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강조한다. 이들은 국가의 장기적 안녕에 이바지 하는 방식으로 세계시장에 더욱 완전하게 통합하려면 결국에는 선진국들과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과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 부족한 자원을 집중하여 사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Amsden, 1989; Wade, 1990; Woo-Cumings, 1999).

지난 1960년대부터 1980년대의 기간 동안 동아시아 국가들의 높은 경제 성장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다. 이에 대해 주류 경제학자들은 자유무역의 기여를 주장하거나, 동아시아 국가의 정부 개입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약했거나 효과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하고, 다만 경제의 기초 조건을 적절하게 조성한 공헌은 인정하였다. 특히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반론(Neoclassical backlash)은 (1) 시장실패보다 정부개입에 의한 환율 등 가격의 왜곡과 시장보호가 저성장을 초래하며, (2) 정부실패가 시장실패보다 더 심각하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실증연구 결과 발전국가적 산업정책은 대부분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보호무역, 정부의 R&D 보조금, 일반 보조금, 차별적 금리, 경제 시스템, 시장 왜곡, 가격통제 등 산업정책이 존재함을 나타내는 다양한 변수들이 산업생산량이나 생산성을 상승시켰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와 발전국가론 간의 논쟁은 막스 베버(Max Weber)에 기반을 둔 근대화 이론과 유교 자본주의 또는 아시아적 가치 간의 보편과 특수문제에 관한 논쟁과 맞닿아 있다. 베버는 현대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기제를 종교 문화에서 찾고, 서구의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바로 그 촉발 메커니즘이라고 주장하였다. 여러 종교의 경제윤리 가운데 유독 프로테스탄트 윤리만이 이윤

지 여러 경제발전 이론들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했다. 그의 계획-합리적(plan-rational) 발전국가 시각에서는 동아시아의 눈부신 경제발전이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 경제개발계획, 희소자원, 산업정책, 정치적 절연(political insulation) 등과 같은 요소들을 시장이 아닌 국가가 장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추구라는 자본주의적 경제활동과 특별한 친화력을 가지고 있어서 서구에서 가장 먼저 합리적 자본주의가 발생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에 유교가 주도적인 사상적 토대로 자리 잡은 동아시아 지역에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근대 자본주의가 출현할 수 없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시아적 가치에 기반을 둔 유교식 자본주의 역시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⁵

그러나 여러 동아시아 연구자들은 유교사상이 동아시아의 경제발전 과정에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베버 이론에 수정을 요구하거나 비판을 가했다. 동아시아 경제발전이 유리한 작용을 한 유교문화의 특징으로서 (1) 가정 내에서의 사회화 과정, 특히 자제력과 엄숙한 태도로 일과 가정과 의무에 임하는 것, (2) 집단에의 협조, (3) 계층의 중시, (4) 인간관계의 상호보완성 존중 등을 들 수 있다(김정계, 2002).⁶ 1990년대 들어 역내의 정치지도자들도 이 논쟁에 가세하였다. 싱가포르의 리완유와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중국의 장쩌민(Jiang Zemin) 등이 유교적 가치에 토대를 둔 아시아적 사회가 존재하고 있으며 또 규범성을 갖고 있어 서구사회로 수렴되지 말아야 함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서구 및 아시아 내부에서도 반론이 적극적으로 제기되었다(손열, 2010; 전홍택·박명호, 2010: 193-194).

이러한 이론적/이념적 논쟁 속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는 1980년대 이후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다. 이는 일본과 한국 그리고 대만에 이어 경제성장과 발전국가적 추격전략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좋은 사례로 인식되었다. 무

-
5.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아시아적 가치는 일의적으로 정의 내리기는 어렵다. 아시아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 넓고 다양한 민족적 분포와 종교적 다양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학자들은 가족주의, 인치주의, 권위주의, 민족의식, 공동체 의식 등을 아시아적 가치의 핵심적 구성요소로 들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문화를 배경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은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경제개발을 추진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교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적 가치의 해석은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을 선도한 동북아의 유교가 동남아의 불교 또는 회교적 가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Sub-Orientalism'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6. 유교적 가치가 경제발전이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다 조화롭고 안정된 사회를 가능케 했다는 옹호론의 주요 저작들은 김일곤(1999), 최석만(1999), 김병국·임혁백(2000), 함재봉(2000), 김성철(2001), 이홍중(2002), 유석춘(2003) 등이 있다.

엇보다도 경제적 민족주의는 동남아시아 발전국가의 출현에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일본, 한국, 그리고 대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민족주의는 서구의 경제발전을 뒤쫓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중상주의와 결합되었다.⁷ 이러한 맥락에서 1990년대 들어 ‘동아시아의 기적(East Asian miracle)’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다.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공산품에 대한 세계 시장의 확대, 거시경제 지표의 안정, 보다 나은 고용 기회, 부와 번영의 지속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속에서 발전주의적 모델에 심취하게 되었다. 이들 국가들의 기업들은 자본 조달을 주식이나 자본시장이 아니라 주로 은행 용자에 의존하였다(Johnson, 1982; Woo-Cumings, 1999). 일본의 발전국가 모델이 그랬던 것처럼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기업들은 밀접하게 제휴된 은행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했으며 이러한 자본들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계속적으로 만기연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기업들에게는 안정적인 자본 조달을, 은행들에게는 꾸준한 이자를 제공했던 것이다(World Bank, 1993).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특히 말레이시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적 가치 담론이 등장하여 발전하던 시기에 총리를 역임하는 등 20년이 넘는 기간 말레이시아는 물론 동남아시아 내에서의 담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마하티르 전 총리 때문이다. 사실 말레이시아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개방된 경제체제 중의 하나였다. 영국 식민지 통치 시기부터 1차산품을 수출하면서 대외에 개방되었던 말레이시아 경제는 독립 초기에도 자유방임적 경제정책을 취하는 등 일찍부터 외부에 개방된 경제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1970년대 이후 국가주도의 수출지향적 발전전략이 시작되었을 때도 이런 전통의 영향을 받아 대외에 개방적인 경제정책을 계속 유지했고 세계시장으로의 통합은 더욱 가속화 되었다. 단적으로 1994년 말레이시아의 무역의존도는

7. 티제이 펨펠(T.J. Pempel)은 배태적 중상주의(embedded mercantilism) 정책이 1960년대 이후 일본 거시경제의 성공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일본은 패전에 따른 정치적 갈등을 케인즈주의적(Keynesian) 총수요관리정책, 인플레이션, 조합주의(corporatism) 등을 통해 감소시킨 것이 아니라, 국내산업 보호, 산업정책, 수출장려 등을 통한 급속한 성장, 즉 배태적 중상주의에 의해 해소했다. 결과적으로 1960년대 일본에 나타난 보수적 레짐(conservative regime)은 다른 서구 산업사회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것이었다는 주장이다(Pempel, 1998).

159%에 달했다. 마하티르는 자유로운 무역체제가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전체 아세안 국가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임을 인식하였다. 예를 들어 1991년 아세안 장관회의(ASEAN Ministerial Meeting)에서 그는 “열린무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아세안과 많은 개발도상국의 경제가 새로운 보호무역의 물결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자주의 무역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역내 경제블럭의 설치를 주장하기도 하였다(이재현, 2007: 129).⁸

일견 마하티르의 이러한 입장은 그가 주창해온 아시아적 가치 또는 발전 국가적 경제발전 모델과 상충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시아적 가치 및 발전국가 모델이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배태적 중상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마하티르의 이러한 입장은 국내적으로 정치적인 정당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말레이시아 경제발전의 아버지(Bapak Ekonomi Malaysia)’라고 불리는 마하티르는 재임기간 연간 7~8%의 높은 GDP 성장을 꾸준히 이어갔다. 마하티르 재임기간에 말레이시아는 단순히 1차산품 수출에 의존하던 농업국가에서 제조업이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제조업 수출품이 GDP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국가로 탈바꿈했다. 따라서 마하티르의 자유무역에 대한 옹호는 그의 자유무역에 대한 신념이 아닌 말레이시아라는 국가의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전술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그의 자유무역 옹호는 말레이시아 및 역내 개도국 경제의 성장과 보호에 대한 옹호의 수준을 넘어서 자유무역이 필연적으로 무역의 확대를 통해 인류 전체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자유무역 옹호의 근본적 주장을 결여하고 있었던 것이다(이재현, 2007: 130-13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대항담론으로서의 아시아적 가치 및 동아시아식 자본주의의 속

8. 한편 마하티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복합적 평가가 존재한다: “마하티르의 아시아적 가치는 한 때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이 주장했듯이 ‘권위주의를 미화하기 위한 호도’의 성격이 강했다. 마하티르는 1990년대 외환위기 이전에 워싱턴 컨센서스의 어젠다를 가장 많이 실천한 (동남아 지도자이기도 했다). 민영화, 균형재정, 외국인투자 자유화, 무역자유화 등 워싱턴 컨센서스의 어젠다를 1980년대부터 실천했다. 정치적 수사로서 아시아적 가치를 이야기했지만 아시아에서 가장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위기 이전에 이미 시행했던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정책이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컨대 말레이시아의 민영화는 (말레이계 우선원칙에 입각하여) bumiputra(기업인에게 특혜 형식으로 추진되었다)’(이 부분을 지적해준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 드린다).

성이 근본적으로 방어적이고 소극적이었음을 시사한다.

III. 1997~98년 외환위기와 동아시아 발전국가론의 몰락

발전국가모델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계속된 동아시아의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 그 한계에 봉착했다. 특히 1990년대 말의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동아시아의 경제 기적에 대한 환상을 깨뜨렸고, 발전국가모델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부패한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의 동의어가 돼버렸다.⁹ 위기에 빠진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에 기반을 두고 IMF가 제시한 해결책은 규제철폐, 긴축재정, 노동시장 유연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등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조치들이었다.¹⁰ 따라서 외환위기 직후 서구는 물론 동아시아 내의 많은 전문가들도 세계경제의 급속한 시장화(marketization)와 금융화(financialization)라는 압력 때문에 기업경영의 방식이 영미식 신자유주의(Anglo-American neoliberalism)로 수렴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보았다(Dore, 2008: 1097-1112).¹¹

-
9. 1997년 초부터 태국 바트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speculative attack)이 있었는데 IMF 등의 긴급구제에도 불구하고 태국 정부는 그 공격을 막을 수 없었다. 태국에서 시작된 유동성 위기는 곧이어 동아시아 전반에 걸친 금융 패닉을 촉발시켰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리고 한국이 빠르게, 그리고 연이어 유사한 도전을 받았고, 1998년 말까지 한때 동아시아의 기적으로 불렸던 국가들의 성장률이 폭락하고, 실업률은 급등하고, 정치적 혼란이 확산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여내 국가들은 글로벌 자본의 역할과 이에 대한 규제 여부에 대해 더욱 민감해졌다. 금융자본은 그 소유자의 국적에서 점점 더 분리됨에 따라 각국 정부의 압박에 덜 종속적이게 되었으며, 그 결과 가장 많은 이윤을 찾아 빠르고 넓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본의 탈국가화와 글로벌 유연성은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의 발전 가능성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넘어서야 하는 더 큰 장애물로 인식되었다.
 10. 워싱턴 컨센서스의 기원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Williamson(1989)을 참조.
 11. 이러한 수렴가설(convergence hypothesis)은 국가의 자율성을 강조한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과 상반된다. 수렴가설은 세계화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강대국과 약소국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의 권위와 자율성은 약해졌다고 본다. 이 가설은 한 국가의 경제

즉, 1997~98년 태국으로부터 시작된 경제적 위기는 발전국가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지워버리고 국가개입의 필요성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었다. 동시에 1980년대부터 시장근본주의를 주창하는 신자유주의 양식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고 지배적인 위치에 서도록 만들었다.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아시아 내의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적절히 관리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 문제와 더불어 이 지역 내의 금융기관과 정부와 기업들이 공동으로 거대한 금융의 비효율을 낳았다고 주장한다. IMF의 구제금융에 대한 반대급부는 정부재정 지출을 줄이고, 민영화 및 금융과 무역 자유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소위 말하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수용이었다.¹²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진단하면서 리관유 전 총리 역시 서방 비평가들이 주장하는 “정실 자본주의와 연고주의와 같은 아시아적 가치의 부정적인 면들이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고, 손해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일차적인 원인은 아니었다”고 확신한다. 냉전 종식과 함께 아시아의 대 소련 방파제 역할이 상실되자 무역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아시아를 보호할 필요성을 못 느낀 미국은 시장개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리관유는 이 과정에서 IMF, WTO를 비롯한 세계 경제기구들과 투자자들이 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강은지, 2001).

동아시아 경제위기 당시 리관유와 마하티르는 더불어 아시아적 가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평가 받았다. 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 정치 지도자들은 IMF 구제금융을 받아들이고 시장경제 원리를 준수했던데 비해 마하티르 총리만은 이를 거부하고 자본통제를 했기 때문이다. 한때 아시아의 경제기적

가 세계시장에 통합되면 될수록 어떤 정책이 규제철폐와 시장자유화와 같은 세계시장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그 정책이 실패할 확률은 더욱 커진다고 주장한다. 세계경제의 통합이 심화되고 인위적 장벽이 허물어짐에 따라 자본가, 숙련공, 그리고 전문가 등의 생산요소들은 그들을 원하는 곳이라면 전 세계 어느 곳이건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이러한 자본과 기술을 자국 내에 묶어두기 위해서 정부는 세금을 감면하거나 고용주에게 부담이 되는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완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각국 정책은 신자유주의로 수렴된다는 예상이었다.

12. 이를 두고 당시 미 재무부 차관이었던 래리 썬머스(Larry Summers)는 “IMF는 지난 30년간의 양자간 무역협상보다 훨씬 더 많이 동아시아의 무역과 투자 시장을 미국에게 개척해주었다”고 말할 정도였다(Hale, 1998: 25).

을 일으킨 아시아적 가치가 아시아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몰리는 상황 속에서도 이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마하티르에게 많은 관심이 쏠렸다. 그의 견해는 1998년 9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에의 기고문에 잘 나타났다. 이 기고문에서 마하티르는 아시아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아시아 경제위기를 촉발시킨 것은 아시아적 가치가 아니라 바로 세계 투기자본이라고 비난하였다.

“만약 자본 투기가들이 통화와 주식시장을 공략하지 않았다면 경제적 재난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자본 투기가들이 공략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러한 경제적 재난이 불어 닥쳤다면 그 재난은 이미 오래 전에 초래되었을 것이다.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4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같은 제도과 실제로 같은 정부 하에서 경제적으로 퇴보하지 않고 급속히 성장해 왔다. 확실히 아시아 여러 나라 정부들은 이른 바 ‘기적’을 낳은 모태임이 틀림없다. 이들 나라의 정부만이 그들의 경제적 붕괴 요인이 될 수는 없다” - 신현종(1999: 45)에서 재인용.

1997~98년 위기가 진행됨에 따라 미국과 IMF는 아시아 경제에 널리 퍼져있는 정실 자본주의와 도덕적 해이를 질타했지만 아시아의 발전모델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면 왜 동아시아 위기가 그 전이나 그 후가 아닌 1997년 여름에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Pempel, 1999). 아시아 내에서, 그리고 신자유주의를 신봉하지 않는 서구 학자들 내에서 동아시아의 위기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동아시아 경제위기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지위가 향상된 동아시아 국가들을 길들이기 위한 선진국들, 특히 미국의 사주를 받은 IMF의 음모(conspiracy)나 선진국들의 사다리 걷어차기(kicking-away-the-ladder)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극단적 견해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Wade and Veneroso, 1998; Chang, 2002). 그러나 온건한 견해를 가진 많은 학자들 또한 경제위기 이전에 적절한 국내적 보호 장치 없이 서둘러 추진된 금융시장 자유화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규제되지 않은 세계 금융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하였던 점에 주목한다.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에게 그 위기는 재정

위기가 아니라 유동성의 위기, 오히려 금융위기였다(Radelet and Sachs, 1998).

특히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투자붐과 자산 거품을 국내 저축과 국내 은행을 통해 감당하기는 진작부터 어려워졌기 때문에 민간자본의 해외차입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아시아에서 외부자본의 유입은 1986~90년 사이의 기간 동안 GDP의 평균 1.4%에서 1990~96년 사이의 기간 동안 6.7%로 위기 직전에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이런 해외 차입은 태국과 필리핀에서 GDP의 15% 정도, 말레이시아에서 8%, 인도네시아와 한국에서 5%에 상응하는 규모를 구성했다. 이런 거대한 양의 투자는 해외에서 단기 만기 형태로 아시아 금융 기관들과 국내 회사가 빌린 반면, 장기 만기 기반 하에 국내에 빌려주게 되었다. 이것이 위기의 속도와 깊이에 치명적이었다고 증명되는 만기 불일치(mismatch)이다. 게다가 이렇게 들어온 투자의 15~40%는 장기적인 인프라 기반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투기적 분야에 유입되었다. 결과적으로 아시아 국가들 차원에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투기적 유동성이 급증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번 위기가 구체화되자 쉽게 들어온 투기자본은 더 빠르게 빠져나갔다.

더욱이 이렇게 들어온 자본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단기 만기의 달러를 빌려와 장기 만기의 국내 통화로 빌려준다. 이런 방식은 미국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한 아시아 차입자들에게 매우 이익이라고 증명되었다. 그리고 아시아 수출업자들 사이에서는 1990~95년의 기간 동안 이런 방식으로 붐이 일어났다. 아시아 차입자들은 뜻밖의 이익을 얻었던 것이다. 그러나 1995~96년 수출이 침체에 빠지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자 단기 만기 부채는 외환 보유가 감소함에 따라 더욱 많은 국내 통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달러에 가치가 고정된 통화들은 매우 취약했다. 정부는 고정환율을 포기하거나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지출해야 하는 선택에 직면했다. 결국에는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받은 경제가 그들의 통화 가치를 평가절하 해야 하는 압력을 받기 전에 그들은 부족한 보유고를 막대한 양을 사용해서 고갈시켰다(그것이 이번에는 남아 있는 핫머니의 유출을 촉진했다).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은 국가들에서의 생산 손실은 17.6%에서 거의 98%까지로

추정되었고, 빈곤선에 있지 않았던 1,500백만에서 1,700백만의 아시아인들은 빈곤선 밑으로 떨어졌다(MacIntrye, Pempel, and Ravenhill, 2008: 4-13; Sheng, 2009: 309).

IV. 신자유주의적 사회화(neoliberal socialization)와 아시아적 가치의 확장

1990년대 말 이후 발전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온 신자유주의는 2000년대 중반 들어 비판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경제를 개방하고 국가 역할을 최소한으로 유지한다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할 것이라는 신자유주의의 주장이 실제의 현실과는 괴리가 컸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자유주의를 수용한 라틴아메리카 및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적 성과는 국가개입을 추구한 중국, 인도 및 베트남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성과에 비해 훨씬 뒤쳐졌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주류 담론은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보다 본격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Woods, 2009; Calhoun and Derluigan, 2011; Park, Hill, and Saito, 2012).

아시아 지역에서는 장기불황에 따른 일본의 급속한 쇠퇴와 워싱턴 컨센서스의 득세로 인해 막을 내리는 듯했던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1997~98년 위기 당시 동남아시아의 경제를 정실 자본주의 또는 도덕적 해이와 같이 조롱하듯 낙인 찍었던 신자유주의의에 대한 신뢰가 2008년에 시작된 세계경제위기로 무너졌기 때문이다.¹³ 동아시아 위기 속에

13. 세계 자본시장이 급속도로 경색되고 많은 국가들의 경제가 빠르게 침체됨에 따라 미국도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기조를 폐기하고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Troubled Asset Relief Program)을 통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관들에게 막대한 공적 자금을 신속하게 투입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불과 몇 주 만에 1조 달러 이상의 공적 자금이 구제 자금으로 할당되었다. 오랜 기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자 시장 자유에 대한 오랜 신봉자였던 알랜 그린스팬(Alan Greenspan)은 2008년 10월 의회 공청회에서 그가 자유시장의 자기치유적 힘을 지나치게 신뢰했고 방만한 모기지 대출의 파괴력을 예측하는데 실패했다고 인정했다(Brooks, 2008).

서 확립된 친시장적 교훈들의 권위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듯했으며, 2008년 금융공황이 아시아보다는 미국과 유럽연합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다.¹⁴ 그러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전의 시기에 아시아적 가치라는 대항담론 형성을 통해 신자유주의적 담론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던 자세에서 탈피하여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초유의 역내 경제위기를 공동으로 경험하면서 지난 10년간 신자유주의적 사회화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시아적 가치의 재점화 또는 확장 담론은 이러한 복합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것의 성격은 아직 과도기적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크게 다음의 두 가지를 주요 특징으로 한다.

첫째, 중상주의적 경향의 약화 및 선택적 자유화이다.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의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수용은 IMF 등을 통한 외압에 의한 것이기도 했지만 자국의 경제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자생적 노력의 방편이었다. 때문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신자유주의적 사회화의 이면에는 여전히 신자유주의적 교리와 현실 간의 큰 차이가 존재한다. 즉, 발전국가적 제도적 유산이 여전히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혁신의 범위와 강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동남아시아의 정치 지도자들과나 관료들은 자국 경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시장주의적 경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지만 그것은 여전히 발전국가적 논리(developmental rationale)로 무장된 것이다(Hill, Park, and Saito, 2012: 2).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2008년 세계경제위기가 동남아시아 국가들 내에서도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영향력을 약화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미 여러 제도 속에 배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아래 및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는 것처럼 동남아시아의 정책 엘리트들은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신자유주의적 담론에 대해 보다 유연하고(flexible) 수용적인(receptive) 자세를 취해왔다.

14. 동 위기는 10년 전의 위기에 비해 엄청나게 더 많은 자본손실을 가져왔다. 현재 그리스 재정위기로 촉발된 유로존의 위기는 더 큰 위기의 전주곡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10).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사회와 구분되는 아시아적 정체성에 바탕을 둔 역내 공동체 확립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아래 자세히 언급할 미시적 정책 처방 외에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적 가치의 확장 노력은 동아시아 공동체에 관한 담론으로 확대재생산 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시장적 가치의 확산이 반드시 친서방적(pro-Western) 또는 친미적(pro-American) 정책의 추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인식의 전환이 그 출발점이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지난 1990년대 중반 마하티르 등을 중심으로 쏟아낸 역내 경제통합 담론이 미국의 반대와 중국과 일본 간의 알력으로 실패로 돌아간 아픈 기억이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크게 확산된 위기의식은 최소한 경제영역에서의 공동운명체 의식(sense of community 또는 common identity)의 재점화로 나타나고 있으며 아세안 국가들의 역할과 위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Webber, 2001, 2010). 또한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의 등장뿐만 아니라 미국의 재등장으로 인해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둘러싸고 매우 복합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¹⁵ 이 두 가지 특징을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1. 중상주의적 경향의 약화 및 선택적 자유화

지난 1990년대 말 동아시아의 경험에서 흥미로운 점은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불확실성 투성으로 여겨졌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이전 수준의 성장률로 회복했느냐는 것이다. 미국발 경제위기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도 틀림없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일시적이었고 V자 모양의 회복을 보였다. 1999~2000년까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그리고 필리

15. 중국이 중화문명, 즉 유교적 전통에 근거한 가치를 조심스럽게 들고 나오면서 아시아적 가치는 재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문명적 부상, 즉 중화문명의 부상이며, 이는 중국적 가치와 서구보편적 가치를 융합한 새로운 문명의 창조과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손열, 2010: 19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동남아시아의 담론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크게 부각시키지는 않았지만 '중국'이라는 요소의 등장은 아직까지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담론 형성에 유동적(fluid)이고 불확정적인(indeterminate)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핀의 GDP 성장률은 거의 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 왔다. 1997~98년 동남아시아의 회복보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2008년 위기로 인한 최악의 영향에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경제가 보여준 상대적인 면역력 또는 유연성이었다. 동남아시아는 왜 그리고 어떻게 큰 위기 없이 최근 세계경제위기의 파고를 넘을 수 있었는가? 그 답의 일부는 1997~98년 위기에 대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대응에서 찾을 수 있고, 시장 근본주의와 그 결과로서 미국을 휩쓸고 있던 ‘카지노 자본주의(casino capitalism)’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막으려는 일련의 과정에 나머지 답이 있다(Pempel, 2010).

1997~98년 위기를 겪은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적 참사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 즉, 보다 많이 시장 중심의, 경쟁적이고 국제적으로 개방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했다. 대체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은행 차입 자본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나 자본시장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나아갔다. 또한 그들은 자국 금융기관과 해외 금융기관 간의 합병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곧 금융의 완전한 자유화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동시에 법령상으로는 존재했으나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던 여러 규제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했다. 동남아시아에서 어느 나라도 자국의 자본시장을 완전하게 자유화함으로써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전적으로 수용한 나라는 없었다. 이는 곧 규제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자본시장이 본래부터 효율적이고 자립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자기 교정 능력이 있다는 신자유주의적 확신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개방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극심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불안정과 취약성을 줄이려고 고안된 다수의 조치들과 병행되었다. 동아시아 경제위기로부터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직접적인 영향은 덜했던 그 밖의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긴축기조 유지, 외환보유액 확대, 금융규제 강화, 단기 자본 유출입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시, 더욱 정교하고 적극적인 규제 시스템 운영, 일련의 통화 스왑 협정 체결을 위한 정치적, 행정적 노력을 기울였다(Pempel, 2006, 2008; Hamilton-Hart, 2008; Grimes, 2009).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사례가 앞서 언급한 태국의 ‘탁신노믹스’이다. 탁신 총리(2001~06)의 탁신노믹스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차원으로 요약된다. 첫째, 세계적인 화교 자본가 출신인 탁신은 국가를 기업으로 보고, 총리는 CEO와 같은 역할 수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여 강한 리더십과 결단력을 보이려 하였다. 둘째, 모든 관료들은 자신들의 비전과 의무, 목표를 추진하고 제3자에 의해 평가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셋째, 국가가 자본과 산업에 대해 통제를 하는 가운데, 빈민이나 농촌 등 경제적 소수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제공하는 정책을 펴고 서민들의 소비에 기반을 둔 내수증대를 목표로 합과 동시에 국내경제와 국제경제 간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즉 자유무역에 기반을 둔 수출 극대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질적으로 향상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꾀하였다. 탁신의 이러한 전략은 기업부채 탕감,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확대 및 대출, 주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과감한 투자, 저렴한 의료서비스, 마이크로 대부, 농가부채 상환유예 조치 등의 방법을 통해 달성되었으며, 이러한 정책시행으로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실제 정치·경제에서는 소외 받았던 빈농층으로부터 중산층, 재계까지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¹⁶

16. 그러나 탁신의 정당 ‘타이 락 타이(TRT)’는 강력한 일당 지배체제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지방에 파벌을 지닌 유력한 정치인을 무분별하게 영입하고 다른 정당과의 정략적인 합종연횡을 추진함으로써 여전히 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인 파벌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일부 학자와 언론, 시민단체들은 탁신의 CEO식 리더십과 대중영합주의적 정책들을 통해 국가를 사유화하고 있다는 비난을 하였는데, 특히 정경유착을 통한 이익추구, 소비주의에 입각한 경제 왜곡, 경제적 분권화의 실패와 중앙 집권화 강화 등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탁신의 ‘민주적 권위주의’는 경제 발전정책의 이름으로 수많은 부패를 양산했던 것이다. 2005년을 전후로 탁신의 부인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된 일련의 부정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여론의 비난은 일파만파 커지게 되었고 급기야 자본가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은 탁신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었다. 특히 ‘민주주의를 위한 민중동맹(People Alliance for Democracy)’을 중심으로 반(反)탁신 운동이 거세어지자 탁신노믹스는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고, 탁신 자신도 2006년 9월 군부 쿠데타로 총리직에서 물러나 망명길에 오르게 되었다(김진호, 2006; 문병도, 2010; 원은지, 2012).

2. 역내 경제통합 및 공동체 구축 노력의 강화

동남아시아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이 IMF, 미국 달러화, 국제 금융 상품에 대한 자신들의 과도한 의존을 완화하기 위해 통화스왑을 고안하고 역내 통화표시 채권시장을 만들기 위해 APT와 같은 지역 공동체를 통한 단체 행동을 했다는 점도 중요하다. 특히 CMI는 2009년에 양자간 스왑협정이 다자간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 기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아시아 통화기금(Asian Monetary Fund, AMF)을 지향하고 있다. 덕분에 동남아시아는 요동치는 국제 자본시장의 영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고, 미국과 영국은 물론 대부분의 서유럽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불가사의한 파생 금융상품들에 많이 투자하지 않는 선택을 해왔다(Pempel, 2010).

아울러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에서 확대되어 온 지역 생산 네트워크는 서구국가, 특히 미국 시장에 대한 동남아시아의 의존성을 감소시켰다. 1990년대 위기 이후에 자국의 총수출 중 대미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일본의 경우 대략 30%에서 16%로, 홍콩은 21%에서 11%로, 아세안은 19%에서 11%로 각각 떨어졌다. 대신 아시아의 시장의 상호연계성이 급격히 높아졌고 중국은 이러한 신흥 생산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하게 되었다. 결국 중국은 최종 시장으로서의 미국에 대한 궁극적인 의존을 증가시켰지만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인해 2008년 경제위기가 동남아시아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그나마 가장 큰 충격은 동남아시아 금융이나 기업 전략의 근본적인 결함에 따른 것이 아닌, 동남아시아 상품에 대한 단기적인 수요 감소 때문이었다. 동남아시아의 회복에서 중요한 요소는 IMF와 미국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떠받들어 왔던 금융세계화에 대해 집단적으로 저항을 한 데에 있다(Sheng, 2009: 315).

동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과 달리 아세안의 경제적 가치는 나날이 신장되어왔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아세안으로의 직접투자 증가와 아세안 국가들에서 노동력이 접하는 비교우위는 생산네트워크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이는 역내무역의 증가와

전 세계에서 동아시아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있다. 1967년에 설립된 이후 냉전시기 동안 아세안의 주요 관심사는 주로 안보와 정치 협력에 치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냉전 이후 구미국가들의 경제 불려화 경향과 시장개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은 1992년에 아세안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AFTA) 설립 협정에 서명하였고 2002년에는 AFTA를 2020년까지 아세안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독립적이고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역내 경제 시스템의 설립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동남아시아 경제에 큰 동력이 되는 한중일 세 국가와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킴으로써 아세안의 경제적, 전략적 위상 제고에 중요한 발판을 마련해 왔다(손열, 2010: 207).

동남아시아는 매우 다양한 지역 제도협정들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매우 독특한 지역이다. 우월감(sense of strength)보다는 약점에 대한 공동의 인식(a shared sense of weakness)이 오히려 역내 새로운 질서를 창출함에 있어 아세안의 역할과 존재감을 크게 한다는 것이다(Jones and Smith, 2007: 152-153). 그 구조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은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이나 APT와 같은 역내 다자포럼의 형성과정에서 상당한 제도적 본원력과 적응력(institutional resilience and adaptability)을 보여 왔다. 최근의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아세안은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구심점으로서 상호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일본, 인도와 같은 역내 강대국들을 한자리에 묶는 역할을 잘 수행해왔다.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아세안의 기여는 구조적 또는 물질적이라기보다는 규범적이고 사회적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Emmers, 2008; Nesadurai, 2008; Koo, 2012).¹⁷

17. 그러나 이와 같은 아세안의 규모의 확대는 그 이름이 담고 있는 동남아 협력체로서 정체성을 점차 퇴색시키고 아시아 전반의 협력체로 자리 잡게 하고 있다. 현 APT 체제만 하더라도 한중일 중심 구도로 짜이고 있다. 오히려 3국 간의 소통과 협력의 창구로 기능하면서 동남아 국가들은 주변부로 밀려난 듯한 인상까지 주고 있다. APT를 기반으로 형성된 CMI를 보더라도 한중일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다. 아울러 아세안 내의 지역주의 외교는 APT와 EAS에 놓여 있다. 중일 간 대립 속에서 운전석에 앉은 아세안은 EAS가 등장하여 한중일이 'plus' 글자를 떼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일본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EAS에 가맹시

V.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담론 분석

본 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아시아적 가치의 확산에 대한 동남아시아의 주요국, 즉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치 지도자들이 재생산하고 있는 담론을 분석한다.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 정치 지도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신자유주의적 사회화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 제시 노력이다. 따라서 그들이 재생산 및 확장하고 있는 21세기적 아시아적 가치는 20세기의 그것보다 순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으로 이것은 그들이 일관되게 추구해온 ‘아세안 방식(ASEAN Way)’의 결과로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또 하나의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국제경제 질서 하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1. 싱가포르

우선 현재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개방된 싱가포르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경제개발을 추구하면서도 이를 ‘강한 국가(strong state)’의 틀 속에 조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실용주의(strategic pragmatism) 또는 중상주의적 세계화(mercantilist globalization) 전략을 추구해 왔다.¹⁸ 2004년부터 싱

키자 중국이 이에 반발하여 APT로 회귀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아세안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행보였다. 중일 간 경쟁 속에서 두 기구 속에서도 공히 아세안이 주요한 위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세안은 중일 간 대립이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장애요인임을 인정하면서도 역설적으로 그 존재 때문에 아세안이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지지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손열, 2010; Koo, 2012).

18. 중상주의적 세계화 전략이란 싱가포르 다국적기업에 의한 대규모 해외 투자를 통한 국부 창출과 전시적 전략(demonstration strategy)을 통한 국제무역 자유화 추진을 위한 전향적 전략을 말한다(Chong, 2007: 953).

가포르를 이끌고 있는 리셴룽(Lee Hsien Loong) 총리는 일견 유연한 정책을 내세우는 실용주의적 입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유로운 경제행위와 고성장이라는 선순환 구조의 확립을 위해 세계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리 총리와 집권당인 그의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 PAP)은 역설적으로 그러한 세계화를 관리하기 위해 더 많은 국가주의(statism)를 강조하는 것으로 평가된다(Chong, 2007: 953-955).

이는 총리 자문역(minister mentor)로서 막후에서 싱가포르의 정치경제에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리관유 전 총리의 제도적 유산과 무관하지 않다. 1984년 그의 부친이기도 한 리관유 전 총리가 이끄는 PAP에 입당하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리셴룽 현 총리는 그 후 여러 부처의 장관을 맡으며 후계자 수업을 받았고, 1990년 부친이 총리직에서 물러나고 고축통(Goh Chok Tong)이 총리가 되면서 경제담당 부총리 자리에 올랐다. 그는 이후 싱가포르 경제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경제위기도 순조롭게 극복한 것으로 평가된다(위키피디아, 2012a). 싱가포르의 사례는 전략적 국가주의가 국경 없는 자본주의, 즉 세계화로부터 최대의 이익을 거두어들인다는 목표와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싱가포르의 정치지도자들은 대내외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새로운 국제정치경제질서에 대한 비전을 조심스럽게 제시해 왔다. 예를 들어, 지난 2007년 리관유는 “(급부상하는 중국과 인도 간의 미묘한 지정학적 관계 속에 위치한) 싱가포르는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이미 어렵고 인기 없는(hard and unpopular) 구조조정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새로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Lee, 2007). 또한 그는 2009년 US-ASEAN Business Council에서 행한 연설에서 “유엔과 브레튼 우즈 체제 하의 국제기구들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체제만으로는 국제적인 안정을 기할 수 없다. 미국이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세력들과 협력하기로 한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지적하면서 여전히 지배적인 신자유주의적 담론에 대한 불신을 표했지만 이것은 과거에 비해 훨씬 순화된 것이었다. 그의 이러한 입장 변화는 과거 ‘아시아 대 서구’라는 대결구도가 (싱가포르와 같은 작은 국가의 입장에

서 봤을 때)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해 퇴색하면서 기존의 강대국인 미국과 신흥강대국인 중국 사이에서 국가적 생존을 도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Lee, 2009a).¹⁹

리셴룽 전 총리의 후임이자 리셴룽 현 총리의 전임이었던 고촉동 전 총리는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매뉴얼에 비교적 충실한 헝신과 싱가포르 경제의 업그레이드를 강조하면서도 요동치는 국제 금융시장으로부터 국내경제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전략을 취했다. 그에게 세계화는 시장친화적이고 창조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인식되었던 것이다(Chong, 2007).

리셴룽 총리 역시 해외 투자자들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국내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섬세한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는 또한 2008년에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각국은 보호무역주의의 유혹을 뿌리쳐야 함을 강조해 왔다. 이를 위해 기존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노력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하는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의 체결을 서둘러야 함을 역설해 왔다(Lee, 2009b). 한편 2008년 금융위기 및 중국의 부상에 대한 싱가포르의 전략적이고 유연한 사고는 리셴룽 총리의 한 국내 언론과의 아래 인터뷰에서도 잘 나타난다.

“금융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축소되고 있고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서 ‘금융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하고 있다. 우리는 항상 개방돼 있고 영어로 말하고 법체제도 잘 정비돼 있고, 통신망도 잘 구축돼 있다. … 중국은 미국, 일본만큼이나 아시아 모든 국가의 주요 경제 파트너다. 아시아의 균형이 바뀌었고 경제의 전체 그림도 변했다. 중국은 그러나 더욱 평화적으로 변모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미국과 이 지역의 안보 문제에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도 동시에 중국과도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왔다. 아마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두 나라를 모두 친구로 지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일 것이다”(이혜운, 2009).

19.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제도적 질서를 구축함에 있어 중국과 미국 두 강대국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2. 말레이시아

앞서 언급하였듯이 말레이시아는 마하티르 전 총리의 재임 시 아시아적 가치 담론 생산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였다. 특히 IMF의 구제금융을 거부하고도 1990년대 말의 경제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8년 이후의 경제위기에도 비교적 효과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 국가이다. 그러나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 특히 싱가포르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서구식 자본주의 담론에 대해 비타협적이었던 말레이시아도 과거와는 달리 대단히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현재에는 과거의 마하티르와 같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국가 지도자가 없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마하티르를 정점으로 하던 기득권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싱가포르의 리관유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마하티르 전 총리도 현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²⁰ 그의 대내외적인 영향력은 과거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이는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말레이시아 정치체제에 미친 영향의 결과이다. 동아시아 외환위기 직후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와 같은 급격한 정치적 변화를 겪지는 않았다. 헌법도 그대로 유지됐고, 1957년 말레이시아 독립 이후 줄곧 여당 지위를 유지해온 UMNO 중심의 연정도 그대로였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연속성이 말레이시아 정치, 특히 UMNO 내부의 권력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은 아니다.

20. 마하티르 전 총리의 영향력은 그의 후임 총리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2009년 4월부터 총리로 재직 중인 나집 툰 라작(Mohd Najib bin Tun Haji Abdul Razak)은 1980년대에 통일 말레이 국민조직의 청년조직 대표를 맡았고, 마하티르 총리의 신임을 받으며 유력 정치인으로 떠올랐다. 2003년 마하티르 총리가 퇴임하면서 압둘라 바다위(Abdullah Badawi) 부총리가 총리직을 이었다. 그 이듬해 라작은 공식이 된 부총리 자리에 올라 당권에 더욱 가깝게 다가섰다. 2008년에는 재무 장관을 겸했다. 정계에서 계속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마하티르 전 총리는 바다위 총리의 실정을 비판하며 라작을 지원하였다. 2008년 11월 라작은 압둘라 총리에 이어 통일 말레이 국민조직(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 UMNO) 대표로 지명되어 2009년 3월 정식으로 대표가 되었으며, 곧이어 바다위 총리가 사임함에 따라 제6대 총리에 취임했다(위키피디아, 2012b).

특히 ‘안와르 요인(Anwar factor)’가 UMNO 내의 권력 지형 및 국민들의 지지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Ping and Yean, 2007: 915-916).²¹ 안와르의 축출은 마하티르 총리가 압둘라 바다위를 부총재로 임명하면서 봉합되기는 했지만 UMNO의 권력승계 구도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 UMNO 내에서 마하티르의 권위도 크게 실추되었으며 국민들의 표심도 이반되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과 권위주의적 정치의 청산을 부르짖었던 안와르와 그의 지지세력의 목소리는 그의 축출 이후에도 큰 반향을 일으키며 UMNO의 개혁을 촉발시켰다(Haggard, 2000: 11).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하티르 총리와 그의 지지세력이 누리던 견고한 기대권을 완전히 와해시키지는 못했다. 그 결과 말레이시아의 정치는 보수와 개혁 세력 사이에서 계속 표류해왔다(Ping and Yean, 2007: 928-929). 이는 아래의 유력한 말레이시아 학자의 인용구에서도 잘 나타난다.

“마하티르의 22년간 독재가 종식되고 바다위가 집권함에 따라 최소한 정치적 수사 차원에서는 정치개혁의 시도가 있었다. ... 그러나 이러한 개혁 조치들은 마하티르에 의해 심어지고 바다위가 완전히 제거하는데 실패한, 매우 뿌리 깊은 구조적인 제약 때문에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Loh, 2006; Ping and Yean, 2007: 929에서 재인용).

정치적 대립과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2009년 4월 취임한 현 라작 총리는 바다위 전임 총리만큼 지지도가 떨어지지 않는 반면 여전히 마하티르의 후광을 등에 업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만의 리더십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대내외적으로 기회가 닿을 때마다 새로운 국제정치

21. 1982년 UMNO에 들어가 청년 국장을 맡으면서 정계에 입문한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은 문화청년체육부 장관, 교육부 장관을 지냈고, 1991년 재무장관에 임명된 데 이어 1993년 부총리를 역임했다. 그러나 UMNO의 부총재로서 마하티르의 유력한 후계자로 떠올랐던 그는 곧 마하티르의 견제를 받기 시작했다. 동아시아 금융 위기의 외중에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었던 그는 적극적으로 경제위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으나, 마하티르 총리는 그가 부패를 저지르고 동성애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998년 9월 2일 해임하였다. 그리고 그는 9월 29일 구속되었다. 마하티르 총리가 부당한 방법으로 정적을 제거했다는 의혹으로 마하티르의 독재가 국내외에서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위키피디아, 2012c).

경제 패러다임의 구축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그는 국제금융체제의 개혁과 관련하여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각국의 금융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 자본의 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국제적 메커니즘의 실행, 둘째, 시장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의 도입, 셋째, 시장의 자율적 규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 경계, 넷째, 선진국의 기득권을 개도국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금융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 등이 그것이다(Razak, 2009). 그러나 이러한 비전은 다분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이어서 라작 총리 고유의, 보다 넓게는 말레이시아의 독자적인, 견해가 반영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외환위기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아 중대한 정치 및 경제적 변동을 겪은 국가 중 하나다. 외환위기의 와중에 심화되는 정치 및 경제적 불안은 국가 및 공동체의 와해 직전까지 치달았다. 결국 32년간 철권통치를 펼치던 하지 모하마드 수하르토(Haji Mohammad Soeharto) 대통령이 1998년에 권좌에서 물러난 이후 차차 안정을 찾아갔지만 비교적 최근까지도 여러 자연재해 등이 겹치면서 정치·경제적 불안이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부정적 기대와는 달리 인도네시아는 2004년 인도네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적 직선제에 의해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Megawati Sukarnoputri) 전임 대통령(2001~04)을 누르고 당선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2004~현재)의 리더십 하에 2008년 경제위기를 잘 극복해왔다. 1인당 국민소득, GDP, 소비 및 수출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는 이미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을 넘어섰다. GDP 대비 부채비율도 40% 아래로 떨어졌고 인플레이션과 환율도 안정화 기조에 들어섰다. 여전히 부패가 만연하고 있지만 이 역시 차차 나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정치적·경제적 체질 개선의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헤쳐 나가고 있는 것이다(Basri, 2011).

이러한 맥락에서 유도요노 대통령의 연설 등을 분석해보면 인도네시아가 그간 어떻게 동아시아 외환위기에 따른 피해의식을 극복하고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신자유주의적 담론에 동화되어 왔는지 알 수 있다. 유도요노 대통령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가 제시하는 담론은 서구의 기득권에 비판적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적응적이고 방어적인 것이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회교국가로서 새로운 국제정치경제질서에 대한 담론과 회교적 가치를 연결시킴으로써 동남아시아의 맹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Yudhoyono, 2008, 2010).

한편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서 2011년 11월 19일에 제6차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동 정상회의는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 및 최근 몇 년 사이에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고조되어 온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갈등 때문에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유도요노 대통령의 의장성명을 통해 천명된 ‘발리 원칙(Bali Principles)’은 에너지와 환경, 금융, 재난관리, 교육, 세계적인 보건 이슈 및 유행성 질병, 아세안 연결성(ASEAN connectivity) 등의 6대 협력 분야 및 경제통합, 국제무역, 지역 및 국제 이슈, 해양협력, 군축 및 비핵화 등의 5개 기타 협력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관계를 선언하고 있다(ASEAN, 2011).

이 중에서 경제 관련 주요 원칙의 의의를 살펴보면 신자유주의적으로 사회화된 인도네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아시아적 가치의 확장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질서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우선 금융과 관련해서는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거시경제적 협력에 모두 동참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전 세계적 경제회복이 결국 자국 경제의 성장과 고용 창출을 위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통합과 관련해서는 역내에 존재하는 개발격차(development gap) 문제의 해소에 역점을 두고 FTA를 통한 아세안 국가들과 동아시아 지역 내 다른 국가들 간의 경제통합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끝으로 발리 원칙은 세계적인 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방된 무역정책을 견지할 것과 WTO의 도하라운드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체제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VI.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광풍이 지나간 후 정확히 10년 후인 2008년에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자 동아시아 외환위기 직후 용도폐기된 것으로 치부되었던 아시아적 가치와 아시아식 발전국가적 담론의 탄력성을 재조명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2008년 경제 위기는 1997~98년 동아시아 위기와 함께 각국 정부는 어떻게 세계화되고 자본이 빠르게 움직이는 세계에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가라는 정치경제학의 핵심 질문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세계자본의 힘과 상호작용해 왔는지를 검토하고, 선진 경제들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담론들이 1997~98년과 2008년의 두 금융 위기 사이에 나타났는지를 분석했다.

신자유주의적 사회화와 아시아적 가치의 확장이란 관점에서 볼 때 2000년대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자본주의 담론은 여전히 본질적인 내용은 다른 두 가지 시스템, 즉 동아시아식 발전국가 모델과 신자유주의적 시장중심 모델의 복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전의 아시아적 가치라는 대항담론 형성을 통해 신자유주의적 담론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던 자세에서 탈피하여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초유의 역내 경제위기를 공동으로 경험하면서 지난 10년간 신자유주의적 사회화가 많이 이루어진 것이다. 본 연구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3개국 정치지도자들의 담론 분석을 통해 아시아적 가치의 확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신자유주의적 사회화와 아시아적 가치의 사이에 있는 새로운 담론의 성격은 그것이 아직 과도기적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크게 다음의 두 가지를 주요 특징으로 한다. 첫째, 중상주의적 경향의 약화 및 선택적 자유화이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가 동남아시아 국가들 내에서도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영향력을 약화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미 여러 제도 속에 배태되어 있다. 동남아시아의 정책 엘리트들은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신자유주의적 담론에 대해 보다 유연하고 수용적인 자세를 취해왔으며, 이를 통해 2008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를 비교적 효과적으로 극복해왔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사회와 구분되는 아시아적 정체성에 바탕을 둔 역내 공동체 확립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적 가치의 확장 노력은 동아시아 공동체에 관한 담론으로 확대재생산 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시장적 가치의 확산이 반드시 친서방적 또는 친미적 정책의 추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인식의 전환이 그 출발점이며, 중국의 부상은 이러한 관념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치 지도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신자유주의적 사회화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 제시 노력이다. 따라서 그들이 재생산 및 확장하고 있는 21세기적 아시아적 가치는 20세기의 그것보다 순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으로 이것은 그들이 일관되게 추구해온 ‘아세안 방식’의 결과로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또 하나의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국제경제 질서 하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동남아 국가들은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원칙에 따른 내부체제의 설계뿐만 아니라 역내 국가들 간에 비록 초보적인 형태이나마 과거에는 없던 역내 안전망(regional safety net)을 구축함으로써 2008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다. 유로존의 위기에 따른 세계거시경제의 불안정, 중미 간의 경쟁 심화에 따른 지정학적(geo-economic) 긴장 등 여러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구상하는 자본주의의 미래가 현재의 연장선상에서 뿌리를 내리게 될 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것은 지배담론과 대립적(conflictual)인 모습을 취하기보다는 보금자리형 연계(nested linkage)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은지. 2001. 「리관유 회고록 『싱가포르 이야기』 하권 속의 한국: 리관유가 본 한국 역대 대통령」. 『민족21』 4월호. pp. 146-149.
- 김병국·임혁백. 2000. 「동아시아 정실자본주의의 신화와 현실: 한국, 대만, 태국」. 『계간 사상』 여름호. pp. 7-74.
- 김성철. 2001. 「한국기업과 가족주의: 한국인의 ‘가족’에 대한 인식과 기업경영에의 적용」.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동아시아 문화전통과 한국사회: 한중일 문화비교를 위한 분석틀의 모색』. 서울: 백산서당. pp. 225-262.
- 김일근. 1999. 「유교적 자본주의의 인간존중과 공생주의」.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2호. pp. 28-60.
- 김정계. 2002. 「유교윤리와 동아시아의 자본주의」. 『동아인문학』 2집. pp. 22-23.
- 김진호. 2006. 「실패한 CEO총리, 탁신」. 『경향신문』, 4월 5일. <http://media.daum.net/foreign/asia/newsview?newsid=20060405185209577>(검색일: 2012. 8. 23).
- 문병도. 2010. 「탁신 前총리, 농가부채 유예·현금배분…계층 갈등 ‘씨앗’ 됐다」. 『서울경제』, 5월 16일.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cono/201005/e2010051617235269740.htm>(검색일: 2012. 8. 23).
- 손열. 2010.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관한 각국의 구상과 전략」. 전홍택·박명호(편). 『동아시아 통합전략: 성장-안정-연대의 공동체 구축』. 연구보고서 2010-04. 서울: 한국개발연구원(KDI). pp. 185-217.
- 신현중. 1999. 「아시아적 가치와 아시아 금융위기」. 한국무역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 37-56.
- 원은지. 2012. 『태국의 국가-자본관계의 변화: 탁신정권 전후의 비교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논문.
- 위키피디아. 2012a. 리셴룽. <http://ko.wikipedia.org/wiki/%EB%A6%AC%EC%85%B4%EB%A3%BD>(검색일: 2012. 7. 16).
- 위키피디아. 2012b. 나집 툰 라작. http://ko.wikipedia.org/wiki/%EB%82%98%EC%A7%91_%ED%88%B0_%EB%9D%BC%EC%9E%91(검색일: 2012. 7. 16).
- 위키피디아. 2012c. 안와르 이브라힘. http://ko.wikipedia.org/wiki/%EC%95%88%EC%99%80%EB%A5%B4_%EC%9D%B4%EB%B8%8C%EB%9D%BC%ED%9E%98(검색일: 2012. 7. 16).
- 유석춘. 2003. 『유교 자본주의: 지배구조와 자본축적』. 전통과 현대.
- 이재현. 2007. 「마하티르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담론 분석: 서구에 비판적인 아시아주의적 발전연대의 추구」. 『국제정치논총』 47권 1호. pp. 121-144.
- 이혜운. 2009. 「글로벌 금융체제 회복에 몇 년 걸려 아시아 국가들 수출위주 정책 바꿔

- 야]. 『조선일보』, 6월 5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6/05/2009060500144.html(검색일: 2012.7.16).
- 이흥중. 2002. 「오리엔탈리즘과 아시아적 가치」. 『계간 사상』 겨울호. pp. 115-135.
- 최석만. 1999. 「유교적 사회를 위한 사회과학적 시론」.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2호. pp. 83-105.
- 함재봉. 2000. 『유교, 자본주의, 민주주의』. 서울: 전통과 현대.
- Amsden, A. 1989.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2011. "Chairman's Statement of the 6th East Asia Summit." Bali, Indonesia. November 19. <http://www.aseansummit.org/news272-chairman's-statement-of-the-6th-east-asia-summit-bali,-indonesia,-19-november-2011.html> (accessed on 16 July 2012).
- Basri, M. C. 2011. "A Tale of the Two Crises: Indonesia's Political Economy." Paper presented at the JICA-RI conference on "The Second Asia Miracle? Political Economy of Asian Responses to the 1997/98 and 2008/09 Crises." Tokyo. February 13-14.
- Brooks, D. 2008. "The Behavioral Revolution." *The New York Times*. October 27th. <http://www.nytimes.com/2008/10/28/opinion/28brooks.html> (accessed on 16 July 2012).
- Calhoun, C. and Derluigan, G. 2011. *The Deepening Crisis: Governance Challenges after Neoliberalism*.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Chang, H. J. 2002. *Kicking Away the Ladder: Development Strategy in Historical Perspective*. London: Anthem Press.
- Chong, A. 2007. "Singapore's Political Economy, 1997-2007." *Asian Survey*, 47(6): 952-976.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10. *Crisis in the Eurozone: Transatlantic Perspectives*.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Dore, R. 2000. *Stock Market Capitalism: Welfare Capit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ore, R. 2008. "Financialization of the Global Economy."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17(6): 1097-1112.
- The Economist. 2010a. "The Global Revival of Industrial Policy: Picking Winners, Saving Losers." August 5th.
- The Economist. 2010b. "The State and Business: Leviathan Inc." August 5th.
- Emmers, R. 2008. "Southeast Asia's New Security Institutions." In V. K. Aggarwal and M. G. Koo (Eds.), *Asia's New Institutional Architecture: Evolving Structures for Managing Trade, Financial, and Security Relations*. New York: Springer. pp. 181-213.
- Friedman, T. 1999. *The Lexus and the Olive Tree: Understanding Globalization*.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 Grimes, W. 2009. *Currency and Contest in East Asia: The Great Power Politics of Financial Region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Haggard, S. 2000.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Washington, D.C.: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Hale, D. 1998. "Dodging the Bullet-This Time." *Brookings Review* (Summer): 22-25.
- Hamilton-Hart, N. 2008. "Banking Systems a Decade after the Crisis." In A. MacIntrye, T. J. Pempel, and J. Ravenhill (Eds.), *Crisis as Catalyst: Asia's Dynamic Political Econom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pp. 45-69.
- Hill, R. C., Park, B. G. and Saito, A. 2012. "Introduction: Locating Neoliberalism in East Asia." In B. G. Park, R. C. Hill, and A. Saito (Eds.), *Locating Neoliberalism in East Asia: Neoliberalizing Spaces in Developmental States*. West Sussex: Blackwell Publishing. pp. 1-26.
- Johnson, C. 1982.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Jones, D. and Smith, M. 2007. "Making Process, Not Progress: ASEAN and the Evolving East Asian Regional Order." *International Security*, 32(1): 148-184.
- Koo, M. G. 2012. "Same Bed, Different Dreams: Prospects and Challenges for ASEAN+'X' Forums."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19(1): 79-96.
- Lee, H. L. 2009b. "Keynote Address by Mr. Lee Hsien Loong, Prime Minister of Singapore, at the 2009 APEC CEO Summit." Singapore. November 13. http://www.pmo.gov.sg/content/pmosite/mediacentre/speechesinterviews/prime_minister/2009/November/keynote_address_bymrleehsienloongprimeministerofsingaporeatheap.html (accessed on 16 July 2012).
- Lee, K. Y. 2007. "Speech by Minister Mentor Lee Kuan Yew at the Tanjong Pagar GRC Orchard Fiesta." July 7. Civic Plaza, Ngee Ann City Building. http://www.getforme.com/previous2007/070707_singaporeinaperiodofgoodeconomicgrowthandsocialdevelopment.htm (accessed on 16 July 2012).
- Lee, K. Y. 2009a. "Speech by Minister Mentor Lee Kuan Yew at the US-ASEAN Business Council's 25th Anniversary Gala Dinner." Washington, D.C. October 27. http://www.news.gov.sg/public/sgpc/en/media_releases/agencies/mica/speech/S-20091027-1.html (accessed on 16 July 2012).
- Loh, F. 2006. "A Season of Odd and Silly Events." *Aliran Monthly*. January 23rd. <http://aliran.com/223.html> (accessed on 16 July 2012).
- MacIntrye, A., Pempel, T. J., and Ravenhill, J. 2008. *Crisis as Catalyst: Asia's Dynamic Political Econom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Nesadurai, H. 2008. "Southeast Asia's New Institutional Architecture for Cooperation in Trade and Finance." In V. K. Aggarwal and M. G. Koo (Eds.), *Asia's New Institutional Architecture: Evolving Structures for Managing Trade, Financial, and Security Relations*. New York: Springer. pp. 151-180.

- Park, B. G., Hill, R. C. and Saito, A. 2012. *Locating Neoliberalism in East Asia: Neoliberalizing Spaces in Developmental States*. West Sussex: Blackwell Publishing.
- Pempel, T. J. 1998. *Regime Shift: Comparative Dynamics of the Japanese Political Econom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Pempel, T. J. 1999. *The Politics of the Asian Economic Crisi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Pempel, T. J. 2006. "The Race to Connect East Asia: An Unending Steeplechase." *Asian Economic Policy Review*, 1(2): 239-254.
- Pempel, T. J. 2008. "Firebreak: East Asian Institutionalizes Its Finances." In M. Timmermann and J. Tsuchiyama (Eds.), *Institutionalizing Northeast Asia: Regional Steps toward Global Governance*. Tokyo: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pp. 243-261.
- Pempel, T. J. 2010. "National Economies and Global Finance." Paper presented at the JICA-RI conference on "The Second Asia Miracle? Political Economy of Asian Responses to the 1997/98 and 2008/09 Crises." Tokyo. September 20-21.
- Ping, L. P. and Yean, T. S. 2007. "Malaysia Ten Years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Asian Survey*, 47(6): 915-929.
- Radelet, S. and Sachs, J. 1998. "The East Asian Financial Crisis; Diagnosis, Remedies, Prospects."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ies*, 1: 1-90.
- Razak, D. S. M. N. B. T. H. A. 2009. "Speech by Dato' Sri Mohd Najib Bin Tun Haji Abdul Razak at the World Capital Markets Symposium." Mandarin Oriental Hotel. Kuala Lumpur. August 10. http://www.pmo.gov.my/?menu=speech&news_id=159&page=1676&speech_cat=2 (accessed on 16 July 2012).
- Sheng, A. 2009. *From Asian to Global Financial Crisis: An Asian Regulator's View of Unfettered Finance in the 1990s and 2000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leifer, A. and Vishny, R. W. 1998. *The Grabbing Hand: Government Pathologies and Their Cur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Wade, R. 1990. *Governing the Market: Economic Theory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Industrializ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ade, R. and Veneroso, F. 1998. "The Asian Crisis: The High Debt Model versus the Wall Street-Treasury-IMF Complex." *New Left Review*, 288: 3-23.
- Webber, D. 2001. "Two Funerals and a Wedding? The Ups and Downs of Regionalism in East Asia and Asia-Pacific after the Asian Crisis." *The Pacific Review*, 14(3): 339-372.
- Webber, D. 2010. "The Regional Integration that Didn't Happen: Cooperation without Integration in Early Twenty-First Century East Asia." *The Pacific Review*, 23(3): 313-333.

- Williamson, J. 1989. "What Washington Means by Policy Reform." In J. Williamson (Ed.), *Latin American Readjustment: How Much Has Happened*.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p. 7-20.
- Woo-Cumings, M. 1999. *The Developmental Stat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Woods, N. 2009. "Global Governance after the Financial Crisis: A New Multilateralism or the Last Gasp of the Great Powers?" *Global Economic Governance Program Working Paper 2009/54*.
- World Bank. 1993. *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Yudhoyono, S. B. 2008. "Statement by Dr. Susilo Bambang Yudhoyono,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at the G20 Summit." Washington, D.C. November 15. <http://www.presidentri.go.id/index.php/eng/pidato/2008/11/15/1033.html> (accessed on 16 July 2012).
- Yudhoyono, S. B. 2010. "Opening Remarks by H.E. Dr. Susilo Bambang Udhoyono,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at the Opening Ceremony of the 6th World Islamic Economic Forum." KLCC. Kuala Lumpur. May 19. <http://embassyofindonesia.it/opening-remarks-at-the-6th-world-islamic-economic-forum/> (accessed on 16 July 2012).

Southeast Asian Perspectives on the Future of Capitalism: Between Neoliberal Socialization and the Expansion of Asian Values

Min Gyo Koo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way in which Southeast Asian countries have responded to the force of economic globalization for the past two decades. What were the institutional roots of the ‘Asian value’ debate at the turn of the 1990s? Why and to what extent did the alleged collapse of the Southeast Asian developmental model in the wake of the 1997-98 Asian financial crisis put an abrupt end to the debate? Have Southeast Asian countries sincerely pursued neoliberal policy reforms since then?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s the policy responses and discourses found in Indonesia, Malaysia, and Singapore, all of which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evolution of the Asian value debate. The main argument of this study is two-fold: (1) Southeast Asian countries have been ‘neoliberally socialized’ in the aftermath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2) In response to the 2008 global economic crisis, they have attempted to revive and expand ‘Asian values’ in their economic policy-making, while not seriously challenging the dominant Western discourse on capitalism as they once did before the Asian crisis. Southeast Asian countries’ individual efforts at liberal economic reform on the one hand and their collective efforts at webbing regional safety nets?including free trade accords and currency swap agreements?on the other indicate that Southeast Asian capitalism will remain nested in, rather than conflictual with, the mainstream neoliberalism.

Keywords: Southeast Asia, neoliberalism, Asian value, Indonesia, Malaysia, Singapore

